

충남리포트 제217호

ChungNam Report

2016. 4. 14.

CONTENTS

〈요약〉

1. 지역안보 개념의 등장
2.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의 특징
3.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관리 방향
4. 통합방위법과 재난 발생시 군의 역할
5. 포괄적 충청남도 도민안보체제 구축 과제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 창 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changsoo@outlook.com

본 연구는 충남 지역에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 약

-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를 제시함
- 현행 법체계에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비롯해 국가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기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재난관리의 조정, 통합방위지역협의회와 민방위, 재난관리위원회 등의 협의 조정같이 충청남도 차원에서 운영의 모를 살려 나간다면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설계 가능
- 포괄안보를 지역에 적용하면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안전수칙, 군과 협조를 위한 신속대응부대 창설, 충남도민안보포럼 등을 제안
- 우선 도민안전수칙을 만들고 통합방위법과 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안보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국제 사회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못지않게 재난 대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안보개념 등장
 -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의 공통분모가 늘어나서 안보와 안전을 융·복합적으로 사고하는 추세
 -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전망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시민 네트워크 형성 등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 강조
 -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민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모든 형태의 위협과 위험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각종 정부기구를 재정비하여 재난대비를 강화
- 위협과 위험이 다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수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역안보의 실질적 주역이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지역사회에서 도민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정부형태, 문화 등의 배경에 따라서 재난대응체제의 특이점을 보이고 있음
- 첫째, 분권체제의 발달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정부 또는 책임의 수준별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 분권화된 대응 단계와 수준에 적절하게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고, 지역 차원에서는 훈련과 점검, 실행이 체계화 일상화
- 둘째, 재난관리의 일선기관은 지방정부와 현장으로 책임 부여
 - 지방정부가 재난에 대한 일선기관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원
 -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협력, 지방에서 재난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담당
- 셋째,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각 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중요
 - 재난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의 기본구조는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
- 넷째,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거버넌스 강화
 - 재난 대비와 구조는 특정한 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재난대응체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
 - 재난관리의 현대적인 추세는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 다섯째, 군의 지원

- 미국의 경우 재난구조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일본도 자위대가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임무 담당
- 정부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군의 훈련과 능력은 재난구조에서 잘 대비되어 있기 때문
- 국가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결합

03

▶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관리 방향

-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통합방위의 내용에 지역 차원의 새로운 대응태세가 필요
-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급증하는 안전, 안보,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1차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
- 통합방위 예규에는 통합방위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군대를 비롯하여 각 방위요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존재
 - 하지만 통합방위법에서 기본적으로 통합방위를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므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와는 법적으로 다름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통합방위 개념을 확대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¹⁾
-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민방위대, 국방부 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 구조지원을 위하여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동원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재난안전기본법은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군부대가 재난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지만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의 지원을 요청한다 해도 군이

1) 상세한 내용은 위금숙, 백민호, 권건주, 양기근, 2009 “한국의 재난 현장 대응체계-문제점과 향후 과제”, (서울:대영문화사) 참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에 명시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군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에 군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
 - 재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고도의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은 상호 동의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난업무 수행에 협력
- 통합방위법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안보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라고 개념화
 - 포괄적 도민안보란 첫째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안보와 인간안보를 결합하는 것, 둘째 충청남도 지역에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
- 포괄적 도민안보에 따라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구축, 지역역량을 동원하여 통합안보 태세강화

04

▶ 통합방위법과 재난 발생시 군의 역할

- 그동안 군도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국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난에 대한 복구를 지원²⁾
- 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2015년 4월 6일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 업무협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요청
 - 업무협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국방부는 재난 극복에 필요한 보유 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이번 협약 체결 이전에도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이에 재난관련 업무 협약이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관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발생
- 군은 '기본임무 수행'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
 -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과 피해복구 등 대민지원 실시
 - 하지만 군의 이런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법규가 미약하다는 문제점 존재
 - 결국 국민안전처와 국방부의 업무협정을 통합방위와 재난관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의 개정 필요

2) 재난현장 활동 사례 - 성수대교붕괴참사 1994년 3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1995년 501명 사망, 937명 부상, 대구 상인동지하철 가스폭발사고 1995년 101명 사망, 202명 부상,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3년 192명 사망, 148명 부상, 태풍 루사 2002년 246명 사망·실종, 태풍 매미 2003년 132명 사망·실종 등임. 이와 같이 군은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사고현장정리와 시신수습 복구작업 등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박동균·조기웅, 2013).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통합방위본부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 보완이 필요
 - 지자체장이 군, 경, 소방, 민방위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와 복구체계 지휘
 - 통합방위법 조항에 재난관리의 영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뛰어난 자산인 군을 재난관리로 포함시키기에는 한계
 -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 방위협의회(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개별법에 따라 유사한 기구들이 혼재되어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협의회와 대책기구에 대한 법령 정비 필요

▶ 포괄적 충청남도 도민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 충청남도 차원의 포괄적 도민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제안함

1) ‘포괄적 도민안보’- 개념과 선언

- 포괄안보적 시각에서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는 안보 위협 요소들에 대처하는 개념 정립 필요
 - 국가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인 포괄안보 개념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유행성 질병이나 화산 폭발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및 그로 인한 2차적 재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원의 협력적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가능한 영역
-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단에서 오는 위협과 일상적인 재난 위협을 포괄적·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비전을 담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충남도민 포괄안보 선언’(도민 포괄안보선언) 발표가 필요
- 포괄적 도민안보선언은 유엔이 제시한 ‘인간안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충남도의 브랜드 구축 가능
 - 도민안보선언 이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시아 각국 도시 시민들의 시민안보 선언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민안보 실현을 위한 아시아 지자체간 협력회의’ 등 후속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

2) 포괄적 안보와 충남도민 안전수칙

-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기업 등 정부-시민-시장의 세 주체가 스스로 안전 문제를 찾아내고 치유하는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
- 도민안전수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1.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노력한다. 2. 충남의 모든 공무원들과 군경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선다. 3. 우리 국민은 재해재난 발생 시 어린이를 포함한 노력자의 안전과 구호에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 4.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는 무엇보다 국민안전관리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한다.
- 충청남도민안전관리 수칙은 자연스럽게 민, 관, 군, 경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됨.
 - 통합방위법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안보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초석 마련

3) 충남 신속재난대응부대 창설

-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에 대한 현재의 법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전국의 지자체 관할 지역의 1개 군부대를 재난관련 협력부대로 지정하여 지자체와 재난 관련한 업무협조를 추진
 - 충남의 경우 32사단이 국방부에 의해 협력부대로 지정
 - 충청남도는 통합방위 예규 작성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32사단과 통합방위에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재난관리에 신속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필요성 존재

- 32사단에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파견을 위한 신속재난대응부대로서 minuteman 부대 (가칭 ‘긴급소집부대’)를 편성
 - 특히 국민안전처와 국방부가 재난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충남도와 32사단의 협조체제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

4) 지역 안보거버넌스와 충남 도민안보포럼 운영

- 재난은 대개 그 성격과 유형이 매우 복잡하므로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민 간조직, 각종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조직과 단체, 개인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핵심
- 비정부기구나 지역사회의 대표를 해당 재난관리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 재난대응시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정부조직이나 지역사회의 대표인사들이 재난 발생시 직접적인 수준으로 대처하기 때문
- 지방자치단체, 군·경,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안보포럼」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안보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거버넌스의 좋은 출발³⁾
 -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이 될 수 있어서 「지역안보포럼」은 기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예산과 지원 가능
- 지역안보포럼은 향후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 포럼’으로 발전, 포괄적 도민안보포럼은 다음과 같은 6대축을 중심으로 구성
 - 첫째, 통합방위 6대 요소에 해당하는 지자체, 군, 경찰, 해양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의 담당자
 - 둘째, 교통, 의료, 재난구조, 복구서비스 등 지역 인프라 및 재난구호 관계자

3) 조승래, 2015, “통합방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연구 : 분권형 체계의 도입”,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셋째,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NGO
- 넷째, 언론. 다만 언론의 참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난보도를 목적으로 함
- 다섯째, 학계
- 여섯째, 의회 관계자

김 창 수 원장

코리아연구원

02-733-3348, changsoo@outlook.com

※ 본 리포트는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 구축 방향과 과제」를 요약한 것임.

◆ 참고 자료 ◆

- 고창석, 2012, 양기근 ‘재난관리에 있어서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8(2), 2012).
- 김경찬, 2009, “위기관리체계에서의 효과적인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수행에 연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 김병옥, 2015, “소방방재 재난관리체계 및 선진국 사례 비교론”, 김스정보전략연구소
- 김용성, 2013, ‘예비전력을 활용한 통합방위체계 발전방향 연구’,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 박대섭, 2011, 효율적인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 수행체계 구축방안, (합참, 45호, 43~47)
- 박동균, 2004,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미국과 일본 사례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179-215.
- 박동균조기웅, 2013,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7호, 2013
- 심우배, 2005, ‘미국의 방재조직 및 재난관리, “국토”, “국토연구원”
- 안영운, 박해육, 2008,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시경, 최진열, 2012, ‘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7권 제1호
- 정재병 2012, 지방정부 통합방위체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승래, 2015, “통합방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연구 : 분권형 체계의 도입”,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필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흥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2015-5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2015.12.20
2015-53	금강의 미래, 금강비전으로 말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5.12.30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